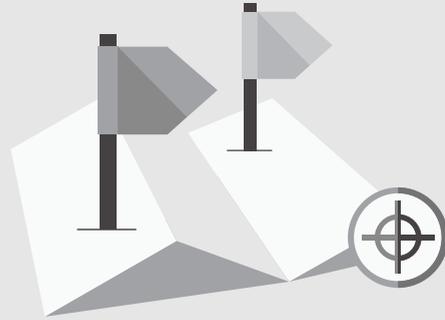


이달의 초점

가족, 세대,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



결혼 안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변수정

가족 기능 및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김은정

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

이윤경

세대갈등 및 생애주기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연령·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남궁은하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과 함의

진화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변동 현상을 둘러싼 국민의 인식과 관련 가치관에 대한 심층 파악을 통해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8,0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TAPI)을 활용하여 총 130명의 조사원에 의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20년 9월 11일~10월 22일이며, 전국 17개 사도의 801개 집계구에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1) 가족 및 가족 가치관과 관련하여 가족기능, 결혼과 가족 형성·구성에 대한 가치관, 2) 연령규범 및 세대 가치관과 관련하여 연령집단 기준에 대한 가치관, 연령규범과 연령차별 인식,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3)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U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IRB 승인(제2020-63호)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번 호 이달의 초점, '가족, 세대,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에 게재된 원고들은 이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세대갈등 및 생애주기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연령·계층 차이를 중심으로¹⁾



Understanding the Perception of Generational Conflicts and Public Policies: Age and Class Differences

남궁은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세대갈등과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세대갈등 완화와 연령통합적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조사 응답자의 76.5%는 세대 간 교류 기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9.1%의 응답자가 세대 간 소통 기회 부족을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 응답자의 82.1%가 노인인구의 증가로 부양부담이 증가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이 고령근로자가 기업·사회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미루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과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갈등 현상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지나친 갈등은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등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인구 연령구조 변

동을 경험하며, 다양한 사회갈등 유형 중 특히 세대갈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0~2016년에 실시한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이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은 2010년

1) 이 글은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에 수록된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49.1%에서 2016년 59.6%까지 이르렀다(정해식 외, 2018).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 문화의 확산은 새로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과 세대 간 단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대갈등은 사회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이로 인한 부모-자녀 세대, 신-구세대의 가치관 충돌로 발생한다는 것이 세대갈등 원인에 대한 전통적 견해이다(조성남, 1991; 박병석, 1995). 또한, 세대 간 교류 부족, 연령에 대한 편견과 이로 인한 차별(연령주의)도 세대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 더불어, 최근 청년인구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사회 전체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왔고, 일자리 등 한정된 자원 배분의 불균형으로 세대갈등이 증가한다는 의견도 있다(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2010). 언론 기사의 세대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세대갈등은 ‘일자리’,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고용 및 경제 분야 용어와 연관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이러한 자원 배분 관련 세대갈등 경향을 잘 설명해 준다(정해식 외, 2018).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세대 간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인유권자들의 표를 얻고자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 위주 선거 공약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이는 결국 청년 정책의 축소 및 노인층-청년층 세대갈등의 심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최유석, 오유진, 문유진, 2015).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혁신으로 ‘연령통합적(age-integrated) 사회’를 처음 제시하며, 세대갈등 완화와 전 연령 공존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기본계획에서는 전 세대가 활발히 교류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연령으로 인한 장벽 없이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교육, 여가, 돌봄 등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세대갈등과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세대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가정·직장·사회 영역별 세대갈등 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아동기-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정부 정책의 필요성, 충분성, 그리고 납세 의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세대갈등은 자원 배분 및 경제 활동과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및 사회계층에 따라 세대갈등과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세대(generation)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생물학적 연령(age)에 따른 세대갈등 인식 차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2.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가. 세대갈등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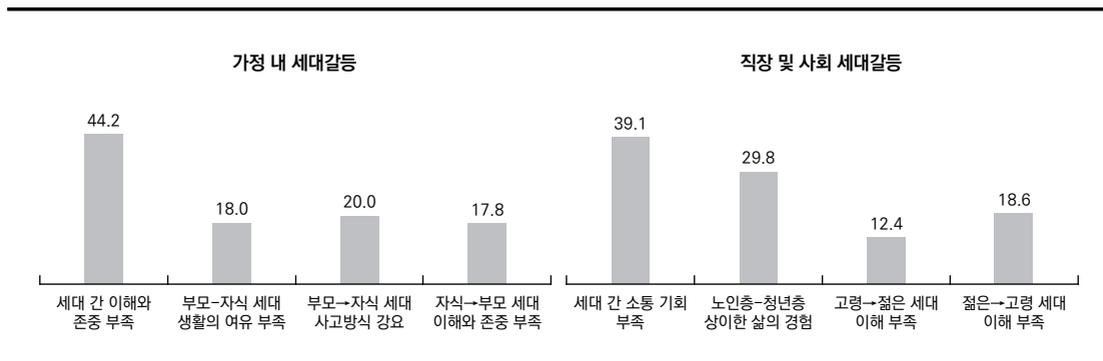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는지 조사한 결과, 가족 내 세대갈등이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은 59.2%, 직장 및 사회에서의 세대갈등이 심각하다는 국민은 72.2%에 이르러, 특히 직장과 사회에서의 세대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가정 내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이유로는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았다.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 저마다의 고층으로 생활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8.0%, 부모-자식 세대 모두에게서 세대갈등의 원인을 찾은 국민이 62.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자식 세대에 강요한다는 응답은 20.0%,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다. 직장 및 사회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은 세대 간 소통 기회 부족이라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았고, 노인층과 청년층이 살아온 경험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29.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세대갈등 원인과 달리, 직장 및 사회에서의 세대갈등의 경우, 젊은 세대의 고령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18.6%로, 고령 세대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12.4%)보다 6.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가정 내 세대갈등의 원인에 대한 연령별, 주관적 사회계층별, 경제수준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적을수록 부모-자식 세대 모두의 이해 또는 생활의 여유 부족이라고 여기기보다 부모 세대의 사고방식 강요가 세대갈등의 원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부모 세대의 사고방식 강요가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본

그림 1.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가정, 직장 및 사회)

(단위: %)



주: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자(가정 4,736명(전체 응답자의 59.2%); 직장 및 사회 5,777명(전체 응답자의 72.2%))를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1. 연령별, 주관적 사회계층별, 경제수준별 가정 내 세대갈등의 주요

(단위: %)

특성	세대 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 저마다의 고층으로 생활에 여유가 없기 때문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자식 세대에게 강요하기 때문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	기타	계
전체	44.2	18.0	20.0	17.8	0.0	100.0
연령						
19~29세	37.5	37.5	28.0	16.2	0.0	100.0
30~49세	42.4	42.3	22.2	18.4	0.0	100.0
50~69세	48.0	48.0	16.3	17.5	0.1	100.0
70세 이상	47.4	47.4	13.8	19.2	0.0	100.0
주관적 사회계층						
상	47.6	20.5	16.1	15.9	0.0	100.0
중	44.0	17.4	21.3	17.3	0.0	100.0
하	43.2	17.8	19.7	19.3	0.1	100.0
경제수준						
상	44.5	18.0	22.2	15.4	0.0	100.0
중	44.6	17.1	20.6	17.7	0.0	100.0
하	43.6	19.0	18.9	18.5	0.1	100.0

주: 1) 가정 내 세대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자 4,736명(전체 응답자의 59.2%)을 대상으로 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6-29> 재구성.

응답자가 70세 이상의 13.8%, 50~60대의 16.3%를 차지한 반면, 20대에서는 28.0%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부모 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노력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식 세대의 부모 세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 부족이 세대갈등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비슷한 수준(3%포인트 이내 차이)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의 사고방식 강요를 세대갈등 주요 원인으로 본 응답자가 상위 사회계층보다 중위 사회계층에서 5.2%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경제수준 및 주관적 사회계층별 가정

내 세대갈등 원인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장 및 사회의 세대갈등 원인에 대한 연령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 내 세대갈등 경향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적을수록 고령 세대의 이해 부족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젊은 세대의 고령 세대에 대한 이해 부족을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 세대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본 응답자는 20대에서 18.3%, 70세 이상에서 7.6%를 차지한 반면, 젊은 세대의 고

령 세대에 대한 이해 부족은 20대 응답자의 16.0%, 70세 이상 응답자의 21.7%를 차지하였다. 경제수준 및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를 본 결과, 중위 경제수준(28.4%)에 비해 하위 경제수준(31.4%) 응답자가 세대갈등 주요 원인

을 세대 간 경험 차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나타난 점을 제외하고, 경제수준 및 주관적 사회계층별 직장 및 사회 세대갈등 원인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연령별, 주관적 사회계층별, 경제수준별 직장 및 사회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¹⁾

(단위: %)

특성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	노인층과 청년층이 살아온 경험이 매우 다르기 때문	고령 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기타	계
전체	39.1	29.8	12.4	18.6	0.1	100.0
연령						
19~29세	37.4	28.2	18.3	16.0	0.1	100.0
30~49세	40.3	27.5	14.1	18.0	0.0	100.0
50~69세	39.7	31.5	9.4	19.3	0.3	100.0
70세 이상	36.5	34.0	7.6	21.7	0.0	100.0
주관적 사회계층						
상	41.2	31.1	9.9	17.7	0.1	100.0
중	40.4	28.4	12.9	18.1	0.1	100.0
하	36.5	31.4	12.4	19.6	0.1	100.0
경제수준						
상	38.3	29.0	10.6	21.8	0.2	100.0
중	40.7	27.9	13.5	17.8	0.1	100.0
하	37.2	32.4	11.4	18.9	0.1	100.0

주: 1) 직장 및 사회 세대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자 5,777명(전체 응답자의 72.2%)을 대상으로 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6-27>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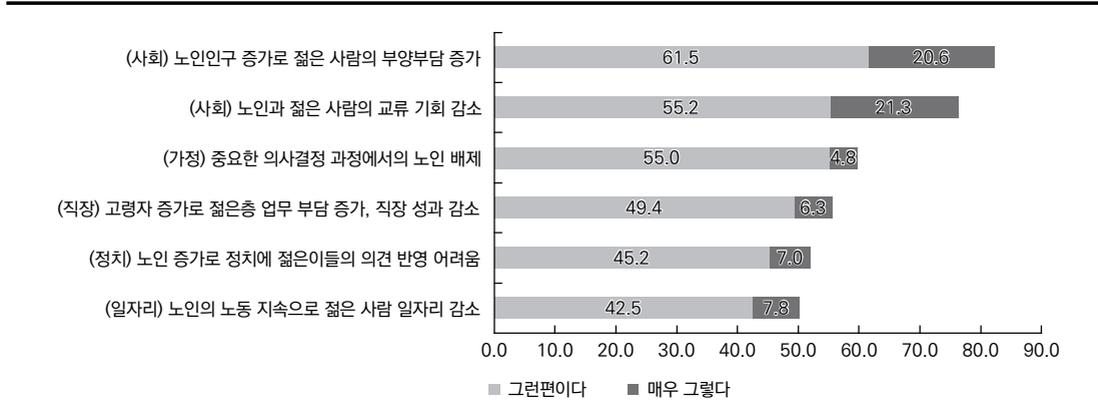
나. 가정·직장·사회 영역별 세대갈등 정도

가정, 직장, 정치 및 사회 전반 등 영역별로 세대갈등 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노인인구 증가로 젊은 사람의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20.6%가

‘매우 그렇다’, 61.5%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총 6가지 세대갈등 관련 세부 영역 중 가장 많은 응답자(10명 중 8명 이상)가 우리 사회에 부양부담 관련 세대갈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젊은 사람 간 교류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여기는 응답자

그림 2. 영역별 세대갈등 인식 수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가 76.5%로(매우 그렇다 21.3%, 그런 편이다 55.2%) 나타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교류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약 10명 중 6명의 응답자(59.7%)가 가정 내 의사결정에서 노인이 배제되는 세대갈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약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이 직장, 고용, 정치 관련 세대갈등이 존재한다고(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5.7%의 응답자는 직장 내에서 고령자 증가로 젊은 사람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직장의 전체적인 성과는 감소한다고 여겼으며, 52.2%는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선거에서 젊은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50.3%의 응답자는 노인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영역별 세대갈등 인식의 연령별, 주관적 사회계층별, 경제수준별 차이를 살펴보았

다. 부양부담 관련 항목을 제외한 다섯 항목에 관하여 연령별로 세대갈등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세대 간 교류가 부족하고, 가정 내 의사결정에서 노인이 배제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중이 높아진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 내 업무 성과, 정치 의견 반영 및 일자리 부문에서 노인층의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정책자원 배분 관련 세대갈등이 젊은 층에서 더욱 크게 인식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노인인구 증가로 젊은 층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견에는 연령을 불문하고 80% 이상의 높은 동의 수준을 보여,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나이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에 따른 세대갈등 인식을 살펴보면, 세대 간 교류 기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에는 모든 사회계층·경제수준

표 3. 연령별, 주관적 사회계층별, 경제수준별 세대갈등 동의¹⁾ 응답자 비율

(단위: %)

특성	젊은 층 부양부담 증가	세대 간 교류 기회 감소	가정 내 의사결정 노인 배제	고령근로자로 인한 성과 감소	젊은 층 정치 의견 반영 어려움	고령근로자로 인해 젊은 층 일자리 부족
전체	82.1	76.5	59.8	55.6	52.2	50.3
연령						
19~29세	83.4	74.4	54.0	58.7	56.0	52.5
30~49세	82.5	75.9	55.9	55.5	54.1	51.5
50~69세	81.0	76.7	63.3	54.8	50.2	49.3
70세 이상	82.4	80.2 ²⁾	68.4 ²⁾	54.1 ²⁾	47.6 ²⁾	46.9 ²⁾
주관적 사회계층						
상	83.1	77.4	69.4	60.4	57.8	54.8
중	81.2	76.5	59.6	56.7	51.0	49.9
하	83.1	76.1	56.7 ²⁾	52.4 ²⁾	52.1 ²⁾	49.4 ²⁾
경제수준						
상	83.3	76.0	62.3	58.7	53.0	54.4
중	80.6	76.3	61.4	57.7	52.5	51.9
하	83.7 ²⁾	76.8	57.2 ²⁾	52.5 ²⁾	51.7	47.5 ²⁾

주: 1) 각각의 세대갈등 항목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냄.

2) 연령, 주관적 사회계층, 또는 경제수준에 따라 각 세대갈등 항목 동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나타낸 경우를 표시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6-31>-<표 6-36>을 이용하여 재구성.

에서 76% 이상의 응답자가 동의하여, 전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에서 세대 간 교류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직장 성과 감소, 젊은 층 일자리 부족)은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령근로자로 인해 젊은 층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직장 전체 성과가 감소한다는 의견에 하위 계층의 경우 52.4%가 동의한 반면, 상위 계층의 경우 60.4%가 동의하였다. 가정 내 의사결정에서 노인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상위 계층(69.4%)과 하위

계층(56.7%)의 동의 비율 차이가 12.7%포인트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젊은 층 부양부담이 증가한다는 의견도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상위·하위 수준에서 약 83%가 동의한 반면, 중위 경제수준에서는 80.6%가 동의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3. 생애주기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의 생애주기별 정책 지원의 필요성과 충분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 정책 지원을 위한 세금 추가 납부 의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노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8%,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15.4%로, 약 10명 중 9명은 노인 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아동 정책에 대해서는 62.3%가 ‘필요하다’, 25.0%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총 87.3%가 아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정책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4분의 1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해, 생애주기별 정책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 정책에 대하여는 60.2%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청년 정책도 비슷하게 6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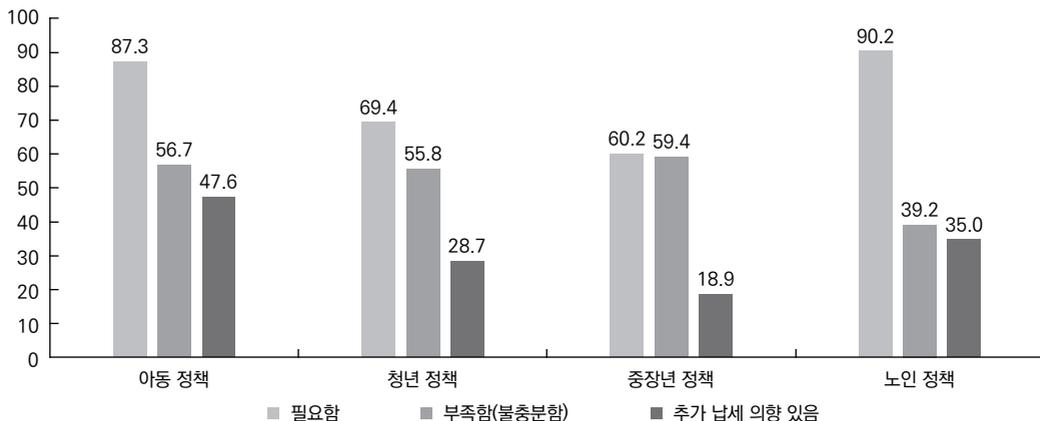
정책 지원의 충분 정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60.8%의 응답자는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충분하다)고 응답하여, 4단계 생애주기별 정책 중 충분하다는 응답

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장년, 청년, 아동을 위한 정책의 경우 불충분하다(충분하지 않다+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장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52.1%가 ‘충분하지 않다’, 7.3%가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59.4%가 불충분 의사를 나타내었다. 아동 정책의 경우 56.7%가, 청년 정책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5.8%가 불충분 의사(충분하지 않다+전혀 충분하지 않다)를 나타내었다.

생애주기별 정책 지원을 위한 세금 추가 납부에 대해서는, 중장년 및 청년 정책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8.9%, 28.7%만이 추가 납세 의향이 있다(매우 많다+많다)고 응답하는 등, 정책 필요성과 부족함에 동의하는 비율에 비해 부정적인

그림 3. 연령대별 정책이 ‘필요하다’, ‘부족(불충분)하다’, ‘추가 납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 정책 관련 추가 납세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아, 47.6%의 응답자가 아동 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매우 많다+많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노인 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35.0%로 나타났으며, 청년 정책의 경우 28.7%, 중장년 정책의 경우 18.9%의 응답자가 추가 납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연령별, 주관적 사회계층별, 경제수준별로 연령대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연령별로 아동, 중장년, 노인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필

요하다+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청년 정책의 경우만 20대(76.8%가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다. 또한, 하위 계층에서 중위 또는 상위 계층에 비해 아동, 노인 각각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장년 정책의 경우 상위 계층, 그리고 뒤를 이어 하위 계층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 차이는 중장년 정책에서만 나타났는데, 주관적 사회계층과 비슷하게 상위 및 하위 경제수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과 달리,

표 4. 연령별, 주관적 사회계층별, 경제수준별로 연령대별 정책 필요성에 동의하는¹⁾ 응답자 비율

(단위: %)

특성	아동 정책	청년 정책	중장년 정책	노인 정책
전체	87.3	69.4	60.1	90.2
연령				
19~29세	86.9	76.8	57.4	89.2
30~49세	88.4	69.1	60.3	90.3
50~69세	86.8	66.4	60.9	90.1
70세 이상	86.7	68.3 ²⁾	61.3	91.5
주관적 사회계층				
상	81.9	72.8	65.0	88.8
중	87.5	68.5	57.1	89.7
하	88.9 ²⁾	69.4	62.9 ²⁾	91.4 ²⁾
경제수준				
상	84.2	71.6	60.4	91.1
중	87.2	69.3	58.5	89.8
하	88.1	69.1	62.1 ²⁾	90.5

주: 1) 각각의 연령대별 정책적 지원 필요성 항목에 대해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냄.

2) 연령, 주관적 사회계층, 또는 경제수준에 따라 각 연령대별 정책 필요성 동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나타낸 경우를 표시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6-41>-<표 6-44>를 이용하여 재구성.

연령대별 정책의 지원 정도가 충분한지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 정도가 불충분하다(충분하지 않다+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이 각각의 정책 대상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아동 정책의 경우 30~40대, 청년 정책의 경우 20대, 중장년 정책의 경우 50~60대, 노인 정책의 경우 70세 이상에서 각각의 정책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청년 정책을 제외한 아동·중장년·노인 정책에 대한 사회계층 또는 경제수준에 따른 불충분성 응답률 차이도 나타나, 상위 계층에 비해 중위·하위 계층에서 아동 및 노인 정책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 경제수준에 비해 하위 경제수준에서 중장년 정책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연령별, 주관적 사회계층별, 경제수준별로 연령대별 정책의 부족함(불충분함)에 동의하는¹⁾ 응답자 비율

(단위: %)

특성	아동 정책	청년 정책	중장년 정책	노인 정책
전체	56.7	55.8	59.4	39.2
연령				
19~29세	53.6	65.5	56.4	35.3
30~49세	59.6	55.0	60.4	40.1
50~69세	55.7	52.8	61.2	39.6
70세 이상	55.7 ²⁾	53.3 ²⁾	56.0 ²⁾	40.5 ²⁾
주관적 사회계층				
상	50.5	56.2	59.0	32.3
중	58.1	55.7	58.3	40.0
하	56.8 ²⁾	55.7	61.1	40.3 ²⁾
경제수준				
상	60.6	58.8	55.1	35.0
중	57.3	55.3	57.7	39.0
하	55.3	55.8	62.3 ²⁾	40.2

주: 1) 각각의 연령대별 정책적 지원 충분성 항목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 또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냄.

2) 연령, 주관적 사회계층, 또는 경제수준에 따라 각 연령대별 정책 불충분성 동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나타낸 경우를 표시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6-47>-<표 6-50>를 이용하여 재구성.

연령대별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역시 연령별,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 연령대별 정책에 대해

70세 이상 노인층에서 추가 납세 의향이 있는(많다+매우 많다) 응답자가 타 연령대에 비해 적었으며, 전반적으로 정책 시행으로 직접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에서 추가 납세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청년 정책의 경우, 20대의 40.3%가 추가 납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관련 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기대와 지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연령대별 정책에 대해 주관적 사회계층·경제수준이 중위 이상인 경우 추가 납세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개인의 경제 상황이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특정 연령대(생애주기) 정책 지지자가 타 연령대(생애주기) 정책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연령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또는 추가 납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다른 연령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추가 납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나, 연령대별 구분보다는 전반적인 정책 관련 인식과 가치관이 연령대별 정책 지지 경향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장년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 80.6%가 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중장년 정책이 필요 없다(전혀 필요하지 않다+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52.4%만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표 6. 연령별, 주관적 사회계층별, 경제수준별로 연령대별 정책에 대해 추가 납세 의향이 있는¹⁾ 응답자 비율

(단위: %)

특성	아동 정책	청년 정책	중장년 정책	노인 정책
전체	43.2	25.6	16.7	33.5
연령				
19~29세	48.0	40.3	17.7	32.4
30~49세	53.9	28.8	19.9	35.5
50~69세	44.6	25.5	19.4	37.1
70세 이상	38.2 ²⁾	21.9 ²⁾	16.3	31.6 ²⁾
주관적 사회계층				
상	45.3	35.9	23.7	35.7
중	49.9	29.1	18.9	37.9
하	45.0 ²⁾	25.7 ²⁾	17.3 ²⁾	30.7 ²⁾
경제수준				
상	51.4	35.6	22.2	40.1
중	49.7	29.9	19.8	37.9
하	44.3 ²⁾	25.9 ²⁾	17.1 ²⁾	30.6 ²⁾

주: 1) 각각의 연령대별 정책 시행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많다' 또는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냄.

2) 연령, 주관적 사회계층, 또는 경제수준에 따라 각 연령대별 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나타낸 경우를 표시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6-57>-<표 6-60>을 이용하여 재구성.

표 7. 연령대별 정책 필요성에 대한 교차 분석

(단위: %)

	아동 정책		청년 정책		중장년 정책		노인 정책	
	'필요하다' 응답자	'필요 없다' 응답자						
아동 정책	-	-	90.7	98.7	88.9	85.0	89.7	65.6
청년 정책	72.1	50.9	-	-	80.6	52.4	70.9	55.5
중장년 정책	61.2	52.7	69.9	38.0	-	-	61.7	46.1
노인 정책	92.6	73.4	92.1	85.7	92.5	86.7	-	-

주: 각각의 연령대별 정책이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새로 분석한 결과임.

표 8. 연령대별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에 대한 교차 분석

(단위: %)

	아동 정책		청년 정책		중장년 정책		노인 정책	
	'납세 의향 있다' 응답자	'납세 의향 없다' 응답자	'납세 의향 있다' 응답자	'납세 의향 없다' 응답자	'납세 의향 있다' 응답자	'납세 의향 없다' 응답자	'납세 의향 있다' 응답자	'납세 의향 없다' 응답자
아동 정책	-	-	74.3	36.9	71.8	42.0	74.0	33.4
청년 정책	44.8	14.1	-	-	61.8	21.0	44.6	20.2
중장년 정책	28.5	10.2	40.7	10.1	-	-	34.9	10.2
노인 정책	54.5	17.4	54.4	27.3	64.8	28.1	-	-

주: 각각의 연령대별 정책 시행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많다' 또는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새로 분석한 결과임.

였다. 이와 비슷하게, 노인 정책 시행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74.0%와 44.6%가 아동 및 청년 정책 각각을 위해서도 추가 납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노인 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아동 및 청년 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이 20~30%대에 머물렀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세대갈등과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 수준에 연령 및 사회계층·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문화 확산 등 사회·문화의 급속한 변화로 세대 간 경험 차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대 간 교류 확대와 연령통합적 사

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주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세대 간 소통 기회와 공감 부족이 전 연령 및 사회계층에 걸쳐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는 만큼,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정부, 그리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고령층에서 높았으며, 고령 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나, 연령별로 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지자체 또는 개별 복지관·재단 단위로 세대공감 프로그램(예: 대전시 유성구 “청소년·어르신을 위한 세대공감 프로그램”, 서울시 50+재단 “세대공감 라이브러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관련 프로그램 내용과 전달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대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문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노년기 포함 전 생애에 걸친 경제 참여와 소득 보장이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 완화와 사회 전체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조성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대갈등 영역 중 노인인구의 증가를 젊은 층의 부양부담 증가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82.1%나 차지하고, 노인인구(고령근로자) 증가로 인해 젊은 층의 일자리 부족, 직장에서의 업무 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각각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노인인구(고령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특히, 상위 사회계층·경제수준에서 고령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고임금 업종 및 직위에서 관련 세대 갈등이 더욱 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고령층의 전문성과 숙련 기술을 젊은 층에 전수하고,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세대 간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을 부양해야만 하는 존재로 여기는 사회 인식, 임금피크제·정년연장 등 고령근로자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조중근, 이해춘, 최강식, 2012). 특히, 사회 전체적인 노인 부양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지속적인 생산 활동과 사회 참여를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이 중요한데, 이는 곧 고령근로자 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중·노년기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조중근 외, 2012; 지은정, 2012).

마지막으로, 적절한 연령대별 정책 시행으로 세대 간 합의를 이끌어 가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연령대를 위한 정책 지지자가 타 연령대 정책에 대해 꼭 배타적인 성향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국민들도

이러한 전 생애주기적 지원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애주기별 정책 중 아동 정책의 경우 타 정책에 비해 필요성, 불충분성, 추가 납세 의향 모두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아동 지원 정책 강화와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젊은 층의 청년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와 지지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응도 요구된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사회제도(예: 청년수당, 기초연금 등 연령을 기준으로 한 소득 지원)의 연령통합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병석. (1995).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부부, 부모자녀, 고부체계간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7, pp. 177-188.
-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2010). 남녀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윤경, 변수정, 김은정, 진화영, 주보혜, 남궁은하, 김주현, 정윤경.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12. 1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전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
- tail.do?articleId=117에서 2020. 2. 1. 인출.
- 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4), pp. 5-24.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성근, 류연규, 우선희, 김근혜. (201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연구(V)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연구보고서 2018-30).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남. (1991). 부모와 자녀의 세대차이에 관한 일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66-73.
- 조종근, 이해춘, 최강식. (2012). 청년·고령자 고용의 상생방안 연구. 서울: 고용노동부.
- 지은정. (2012). OECD 20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최유석, 오유진, 문유진. (2015). 대학생의 노인세대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pp. 228-24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Understanding the Perception of Generational Conflicts and Public Policies: Age and Class Differences

Namkung, Eun H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paper presents a summary of the findings on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s and age-related policies (based on the 2020 Survey of Public Perception and Values toward Policy Responses to Low-fertility and Aging Society). About 76.5% of respondents found that the chance of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decreased over time, while 39.1% pointed to the lack of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as a main cause of generational conflicts. Also, 82.1% of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state's care burden grew with the aging of the population. More than half viewed that older workers were less productive than younger workers and were keeping young people from entering the labor market. Th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and private entities need to implement programs to strengthen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and improve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older workers and productive aging, with a view to reduc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s and achieving an age-integrated society.